

“목숨보다 중요한 이윤은 없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결의대회 ... 모든 노동자 산안법 적용·노동자 참여 완전 보장 촉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가맹·산하 조직이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확대로 쟁취하자”라며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간부들을 중심으로 많은 조합원이 함께 투쟁했다.

민주노총은 4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 사망 추모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청부를 받아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조항도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하위법령 개정안에 도급 승인 범위를 축소해 사실상 위협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살인기업 처벌법 만들어야”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노동자 요구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개악 즉각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로 사회를 멈추자고 약속하면서 국회에 재벌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노동자에게 과로사를, 사용자에게 공짜노동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벌써 산업법 시행령에 도급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축소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위협의 외주화 금지를 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살인기업 처벌 조항이 약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미숙 씨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이윤은 없다.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기업이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투쟁사에서 “사업주들은 타임오프제를 이용해 노동자 권리인 산업안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태진 노안부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방법은 노동자가 직접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며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수백 개의 영정과 함께 ‘ALL 산업법 적용’, ‘YES 기업 처벌’, ‘UP 노동자 참여’, ‘NO 외주화’라고 쓴 대형 팻말을 들고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한국은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다. 산재사망 노동자 가운데중 370명은 과로사했다. 하루 평균 6-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다치는 노동자는 한해 8만 명에 이른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거의 아무런 책임과 처벌을 지지 않는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마흔 명이 죽고 이흔 명이 다쳤지만, 회사대표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냈을 뿐이다.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네 명이 질식사했지만, 법인과 회사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이 민호 군 경우 업체 대표는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정몽준에게 1원도 못 받은 이동걸 처벌하라”

노조, 이동걸 산은 회장 배임 혐의 고소... “7조 원 공적자금 회수 못 하는 외상거래. 대조, 산은에 큰 손해”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을 밀어붙여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에 피해를 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와 대우조선지회, 재벌 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이동걸 산업은행장 배임 혐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의 출자기업인 대우조선의 기업실사를 경쟁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벌이도록 허락해 대우조선의 주요 기업정보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회장은 현대중공업에 적절한 대가를 받지 않고 대우조선의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계약을 진행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정몽준 특혜 매각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회사를 만들어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까지 하청기지화 하겠다는 재벌의 계획에 대우조선은 공짜로 넘겨주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몽준 위한 밀실 특혜 매각”

김호규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매각은 거제, 울산과 경남권 조선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매각이다. 노조가 인내의 끝에 결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배임으로 고발한다”라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밀실에서 논의해 정몽준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의 아들 정기선 3대 세습을 방조하는 구시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 금속노조와 성실하



고 책임 있는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거래는 법률상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모두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와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거래는 산업은행의 최대 이익을 위한 거래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은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 따라 정상화하면서 지분 가치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노조와 변호사는 “이번 거래로 산업은행은 현금 1원도 받지 않고 5년 뒤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기회를 받을 뿐이다. 산업은행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다”라며 “현대중공업이 지배주주가 되면 산은은 소수 주주로 물러앉아 한국GM 사례처럼 대우조선에 문제가 생기면 방조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매각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매각 대가로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정몽준 재벌이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다.

“공적자금 7조 원 포기, 한 푼도 안 받고 넘겨”

산업은행은 이 회사의 주식을 받고 5년이 지나서야 현금 1조 2500억 원이나 신설법인의 주식을 택해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대우조선을 매각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 현대중공업에 무조건 유리한 외상거래인 셈이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피땀 흘려 정상화한 대우조선을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가 정몽준 재벌에 팔아치우려 한다. 현대중공업 인수는 거제 시민에게도 머구름을 드리우는 소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매각 철회라는 노동자,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다면 대우조선 노동자는 경남도민과 함께 싸움을 준비하겠다. 지회는 이번 고소 외에 여러 법률 투쟁을 준비하는 등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상기 지회장은 “검찰이 출자기업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현대중공업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엄벌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 중단은 대우조선 노동자와 대우조선, 산업은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7조 원이 넘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1조 원에 불과한 헐값에, 그것도 외상으로 팔려나가는 산업은행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이동걸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기 대우조선 지회장은 “검찰이 출자기업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현대중공업 재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